

# 도의회, 시작부터 불협화음 '홍역앓이'

### 이도영 의원 상임위 배정·관련선거 의혹 제기 등... 다당체제 경쟁관계 때문 해석... 소통과 협치로 풀어가야

전북도의회 제10대 하반기가 시작부터 홍역을 앓고 있어 향후 임기동안 순항 여부가 미지수다.

먼저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2)의 상임위원회 배정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등 상임위 구성부터 잡음이 나온다. 당초 이도영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과 맞바꾸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를 고집하면서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타 의원들 역시 뚜렷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 노선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10대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최진호

의원(국민의당, 전주6)이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이 이원택 대의협력국정에 '관련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이 저지하는 등 의원들간 견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당장 갈등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쉬이 풀릴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의원들간 협조보다 견제에 보다 많은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후

반기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의장단 구성 전별이라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에서 다당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쟁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각 정당간 기 싸움과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다룰 것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장애물이 만만치 않을 것인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 의회 정치에서 처음 시도된 다당 경쟁 체제인 만큼 각 당이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도정을 이끄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예산과 정책 수행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쳐 건전한 국정발전에 걸림돌은 없었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지금 전북도의회 모습이 무한 갈등이다. 화합과 협력은 운데 간데없다.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과 소통부재까지 겹쳐 한마디로 '난맥상 의회'다"면서 "10대 하반기 의회가 출발이 삐져터져 리지만 좋은 약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남은 임기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도정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김윤덕, 민들레학교 교장 취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이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윤덕 위원장이 최근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더불어포럼'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 20일 대안학교 개념의 교육기관인 전주 민들레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김윤덕 위원장은 "전주 민들레학교를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돼 도움을 손길이 절실한 청소년들의 편한 쉼터이자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지역위장 경선 나흘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울과 김제시·부안군지역위원장 선출 경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과 기호추첨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기호추첨을 한 결과, 전주시지역위원장에는 기호1번 최형재, 기호2번 이상직 후보가 김제·부안지역위원장에는 기호1번 최규성, 기호2번 김춘진 후보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관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을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22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사본을 후보자들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거는 관리당원 현장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자격은 지난 1월15일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7월16일부러 출제 7월15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관리당원이다.

전주시지역위원장 경선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비전대 미래관 3층에서, 김제·부안 경선도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치러진다. /신광영 기자



## 이용호 의원 '지방자치 개정안 공유재산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장 교체 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일반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없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만 따르다보니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장 교체 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권력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양여 조건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자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 양여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반재산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 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영민 기자



국가예산 확보 활동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17년도 국가예산 주요 중점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하여 서울 국회를 방문해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 3명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갖고 있다.

## 정운천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규제완화에 방점·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정부재정투입 확대·제도개선 지속 노력"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이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와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매입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잔여매입지)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 잔여매입지를 최대 100년 간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년 뒤에는 필요한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의 규제도 개선했다.

실제로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새만금청장에게 이관하여 자율적 도시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새만금 지역 내에서는 새만금청장이 건축 및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관련 분야에서 새만금도 새만금청장이 제주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 진행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사업 범위 확대 ▲정부부처간 협의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 구성 ▲의료법인 및 외국의료법인이 보양온천 등의 의료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고, 이어서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등 도내 3당 전·현직 도당위원장이 공동발의했고,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병국 의원, 김용태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고, 소관 상임위원 이학재 의원과 윤후덕 의원, 다선의원인 서청원 의원, 김부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광영 기자

## 야3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1일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언론특별위원회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공영 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률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비율 7대 6)으로 정수 조정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5대 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당 3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등 160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는 뉴스나 프로그램은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보도하고, 불방사기는 행태가 고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

## 더민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 제시

### 공수처, 대통령·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민주 민주당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자격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차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관과 차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와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

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공수처 수사 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 의뢰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밖에 더민주는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훈령으로 돼 있는 대검 검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하는 동시에 검찰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 검찰 이후 보충적으로 수행되던 법무부 검찰을 대검 검찰과 동시에 수행하도록 법무부에 검찰규정(훈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양당 논의를 통해 내주법안이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뉴스

## 이춘석, '셉테드 사업' 익산 신동 유치

원광대 대학로 주변을 포함한 익산시 신동 일대 생활환경과 주거안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무부 '셉테드(CPTD)-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익산 신동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동 사업을 익산으로 유치하는 데는, 이춘석 의원이 마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 예결위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법무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며 사업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이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며, 신동은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여성안심 택배 보관함 ▲가시형 배관덮개 ▲CCTV·보안등·비상벨·반사경 등 방범시설물 ▲엘로캐펫 설치 ▲여성안심 자립이 편 의점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원광대 대학로 주변을 비롯해 신동 일대의 생활 여건과 주변 분위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도의회 행사위, 입실 119안전체험관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21일 입실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물놀이안전 체험장 등 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본부장 등 119안전체험관 관계자와 119안전체험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여름철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예방 체험의 국내 유일 교육장인 물놀이 안전체험장을 찾아 작년에 비해 체험기간이 4주 늘어나고, 체험정원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데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객들의 쾌적한 체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중심 다목적 교육·편의시설 신축현장에서는 공사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계획대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북119안전체험관은 국내 최고의 안전체험시설로 연 15만명이 찾는 국내유일 교육장"이라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니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확충, 이용자 사전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